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계 필요성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의 월지급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공적 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음.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율 수준과 소득대체율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혁이 시급한 상태임.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고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 현 정부는 선거 공약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2013년 도입한 기초연금의 월지급액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지급해 온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함
 -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에 적용되던 감액제 폐지를 함께 공약했기 때문에 실제 부담 증가 규모는 단순히 1인당 10만 원 인상한 경우보다 클 것으로 예상함
 -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유사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도 추진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기초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¹⁾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대체율²⁾ 보완 기능을 모두 수행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노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둠
 - 따라서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무한 상태임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산출되는 만큼 재정 불안정 등 국민연금 관련 문제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각국의 공적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단위: %)

국가명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2012	2014~2015	
호주	조세	조세	13.6
프랑스	16.7	17.25	58.8
독일	19.6	18.7	42.0
그리스	20.0	20.0	53.9
이탈리아	33.0	9.19(근로자), 23.81(사용자)	71.2
스웨덴	18.4	18.5	33.9
영국	통합보험료	통합보험료	32.6
캐나다	9.9	9.9	39.2
미국	10.4	12.4	38.3
일본	16.8	17.474	35.6
한국	9.0	9.0	39.6
OECD평균	19.6	-	40.6
최대	34(헝가리)	35.5(헝가리)	76.6(오스트리아)
최소	9.0(한국)	9.0(한국)	3.8(멕시코)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5), 「2014 국민연금 생생통계」

- 1) 기초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모두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음
- 2)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함.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출함

- 국민연금의 개혁은 소득대체율 즉,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
 - 이미 과거 두 차례(1998년, 2007년)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70% → 60% → 40%로 크게 인하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하향될 경우 국민연금의 유용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 충분한 수준의 요율 인상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전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대체율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임
 - 특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조세방식으로 국민연금 재정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현 정부가 추진할 기초연금의 인상은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반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유용한 대안이 되기 어려움
- 따라서 기초연금 적용 대상을 확정하고,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감액제를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kiri**